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SW산업 육성과 개인 정보보호 강화에 초점”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달 1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달로 취임 4개월째를 맞는 노준형 장관은 정통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IT839', '사이버코리아21' 등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IT정책 전문가. 더욱이 주로 외부 인사들이 도맡다시피 한 정통부 수장에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노 장관이 그러나 IT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 장관은 올해 정통부 정책 기조의 틀을 SW산업 육성과 개인 정보보호 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글 양기석 기자 사진 이혜성 기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즉 국민경제에서의 IT 역할은 정보통신 1등 국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세계정보화 정상회의에서 IT인프라 구축 수준과 실제 활용도를 망라한 평가에서 우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요. 한국은행도 최근 국내 IT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효과가 1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최상위권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839전략의 추진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중 일부를 수정·보완했는데 SW산업 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IT인프라는 S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SW에 대한 육성은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보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조달청 입찰의 90%가 전자입찰이고, 주식거래의 60%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환율하락과 유가 상승 등이 IT시장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나라의 IT산업 총생산은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IT수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2% 늘어난 1,023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예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 1분기 수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3% 늘어나는 등 IT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산업은 서비스-인프라기기/SW/콘텐츠간 선순환 체계를 거쳐 발전하는 독특한 가치사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따라서 올해에는 특히 와이브로와 DMB 등 신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두에 올해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SW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특정 기업에 독과점 돼 있는 국내 SW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SW를 확산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첫째 과제로 공공부문에서 SW 기업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기획부터 유지보수가 지 SW사업 전 단계에 걸쳐 표준화된 발주관리 절

는 보조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금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지나친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빼앗기 보다는 가입실적과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여서 정책 목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을 꾸준히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통신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에 새로운 규제정책의 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의 경쟁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연계한 IT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

□ ■ □

“모든 IT인프라는 SW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SW에 대한 육성은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를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될 것”



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제안가격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망한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개발한 우수 SW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품질 혁신을 위해 관련 인력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이후 한 때 추중했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조금 액수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은 시장 자율로 합리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 관행을 정착시켜 2년 뒤에

해 통신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유·무선통합, 통방융합 등 컨버전스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칸막이식 서비스/사업자 분류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통신서비스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접속·망개방·요금·재판매 등 세부규제 제도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중장기적인 경쟁정책 방향과 세부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통신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

“통신분야 추가 개방 신중해야”

월간 「디지털콘텐츠」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그 첫 번째로 국제번호사로서 국제관계 분야에 정통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 등 국내외적 변화의 시기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대담 이창한 편집장 정리 양기석 기자

최근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면서 향후 국내 통신 서비스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미 FTA 협정문안 교환이 있었고 이달 초에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정 문안이 공개되어야 세부적인 이슈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 선택시 정부 개입을 배제하는 기술선택의 자유원칙화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는 그간 미국이 통상협상에서도 즐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선의 경우 직·간접투자를 불문하고 100% 허용하고 있고, 무선의 경우는 간접투자는 100%, 직접투자는 20%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규모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익성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개방 폭이 크지는 않지만 유무선 구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49%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1차 WTO 양허를 통해 상당부분 개방한 상태(49%)이고 이 역시 OECD 주요국에 비해 개방정도가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현 WTO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상 국제표준을 채택하는 경우 무역장벽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제표준은 아니지만 안보·기만방지·건강 등 정당한 정책목적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국의 기술표준 채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역시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등과의 FTA 체결 시 공공정책 목적과 주파수관리를 이유로 기술표준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도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신서비스 향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 필수설비, 주파수 제약 등으로 독점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경쟁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유무선 통합, 통방융합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통신규제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통신시장별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장기

적인 개편방향과도 조화되도록 필수설비, 재판 매 등 세부 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자·서비스 분류체계는 전송과 정보(콘텐츠)로 구분하고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규제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불법 복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 이슈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저작권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보고서, 미 무역대표부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싱가포르·호주·칠레등과의 FTA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도 이를 적극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이 산업의 발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의 문화와 과학, 지식의 지속적인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므로 보호기간 연장문제도 단순히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자국 문화수준이나 보호기간의 취지,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해 각국의 문화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따라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 당시 '미키 마우스법'이라는 조롱과 비판을 받을 만큼 논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문제도 단순히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자국 문화수준이나 보호기간의 취지,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해 각국의 문화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요구가 명시되어 있는 등 지적재산권 조항에 저작권보호기간 연장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의 최소기준인 50년을 크게 상회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러한 국제협약이 정한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뒤 추후 퍼블릭 도메인(저작자 법적권리가 소멸된 공공재산)으로 편입돼 새로운 저작물 창작토대를 다지도록 한 저작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끝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SW산업, 특히 DC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DC산업은 게임 외에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DC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전략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콘텐츠」가 13년 동안이나 DC산업의 산과 역할을 해 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DC산업의 고급정보지로서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

“DC산업의 향후 과제는 분야별 불균형 해소”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별 기술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힘들게 오른 지금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민간 기업들의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CEO 출신으로 실무 경제 흐름에도 밝은 심 의원을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이창한 편집장 정리 박현수 기자

IT 기술의 발달로 산업 간 융합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가 현실화 되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방융합 기구 설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 진행은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계속 늦출 수만도 없는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통신·방송 융합에 대한 정책은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문화부 간의 시각차와 이해관계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통방 융합 전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통방융합의 개념은 물론,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디지털TV 표준에 대해 정부와 특정단체가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면서 시간을 낭비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처간 갈등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이에 타 경쟁국은 벌써 우리나라를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성과 결단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통방융합의 쟁점은 융합된 서비스를 통신·방송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이지만, 통방융합으로 산업적·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과 사용자 측면 등 국익 창출을 고려한 규제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처는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와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회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협의에 여야나 상임위간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 되면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시장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되면서 SK텔레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조금 제도 시행이후 이동통신사의 시장 점유율 및 가입자 수에 대한 변화는 현재까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05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953만명(50.9%), KTF 980만9,000명(25.6%), LG텔

레콤 650만명(17%)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 되고 약 한 달이 지난 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는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은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대책수립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세대 통신서비스 부문을 타 국가보다 빨리 개발해 선점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가 벤치마킹을 해가는 IT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앞다퉈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해지고 있는

텐츠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조, 인력난 해소, 유통채널 보강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자금력이 많은 대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개발업체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IT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을 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해외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국내 콘텐츠 업체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 ■ □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단기적인 매출에 급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들에게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무선 통합, 통방 융합 등 시장변화에 맞는 신속한 정책으로 국제경쟁력 및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와이브로, W-CDMA, 인터넷전화 등 신규 통신방송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정보통신시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용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꼽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게임이나 오락 위주의 콘텐츠가 많은 반면 학술·교육·생활관련 등의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디지털콘

텐츠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조, 인력난 해소, 유통채널 보강 등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고 자금력이 많은 대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개발업체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IT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을 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해외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국내 콘텐츠 업체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민생 관련 부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방융합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촉구해 나갈 생각이며, 와이브로 등의 신규서비스에 따른 국민편익 증대 등 제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